

광양시 시립영세 공원, 20년 동안 장기위탁 ‘독점’ 운영 논란

전남 광양시립영세공원에 광양시를 믿고 어머니를 안치한 A씨는 2년 만에 묘지를 찾았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 묘지의 흙이 파헤쳐져 기초석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묘역 곳곳은 잔디가 아닌 풀이 자라고 있고, 사용된 제기용품과 음료캔 등도 나뒹굴고 있었다. 성묘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안내판마저 녹이 심하게 녹슬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광양시립영세공원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지적은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 원인으로서는 특정 업체의 20년 동안 장기위탁운영이 거론되고 시청 관계자 관리감독이 허술하며 뒷배경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조성 당시 마을주민 보상해택 운영권 관련 위임 ‘내맘대로’ ‘장례식장 운영’ 이사장, 업체 이용시 좋은 자리 배정 소문

광양시에서 조성한 시립영세공원이 (재)광양영세공원 입찰계약과 위탁계약에 문제점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8년 공개모집으로 4년 계약 체결했고 2023년 민간위탁은 장사법 및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또 4년간

재계약 가능하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계약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처음 조성 당시 대촌마을의 반대 등이 마을주민 보상해택으로 청년회에 운영권을 위임했으며 처음 (재)광양영세공원 법인 설립 당시 법인이사를 그 마을 사람 5명으로 구

성 운영했으나 지금은 당시 원년 이사 3명이며 2명은 외부 사람으로 교체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

또 광양시는 무슨 이유인지 광양시 시립영세공원 민간 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는 오직 한 업체를 위한 공고문인지 20년 동안 독점 운영하고 있어 의혹이 있어 보인다.

한편 (재)광양영세공원이 운영한 시립영세공원을 광양시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광양영세공원 재단이사장은 광양시에 있는 묘장례식장 사장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장례식장 상을 치루는 상주에게 좋은 자리를 배정하고 다른 장례식장에 상을 치루면 상주에 안 좋은 자리를 주며 그 상주가 로비를 하면 좋은 자리를 선택 하게 한다는 소문은 장례식장 업체에 소문나 있다.

지난 3월에 오픈한 매실당 로얄층 유골함이



광양시에서 조성한 시립영세공원의 모습. 안내도는 심하게 녹슬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묘역 곳곳은 무성하게 풀이 자라나 있다.

채워진 사진과 8월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면 유골함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재단 이사장의 로비를 의심하게 보인다.

또한 광양시청 담당자에게 대촌마을 발전기금 관련 질문에 “그동안 마을 행사 시 격려금 및 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발전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 C씨는 “20년 동안 최근 다른 언론에 기사화 되자 지난 추석에 잡쌀 20kg 1포대 한번 받은 적은 있으나 마을 발전기금이나 격려금은 받은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 주었는지 궁금하다”며 “해도 너무한다”고 쓴소리 했다.

기동취재본부

오는 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체감 -20도’ 한파특보 가능성

이번 주 초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린 후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과 29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며 “30일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달 2일까지 기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강수는 오는 28일 월요일 아침 서쪽 지역에서 시작돼 29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지방은 11월 하순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할 수도 있다.

28일 오후부터 29일 새벽 사이 예상 강수량은 천둥·번개 동반 시간당 20~30mm(제주도산지 30~50mm)다.

기상청 관계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대비로 배수시설 점검 및 낙엽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가 완전히 지표로 스며들거나 말

라버리기 전 찬 공기가 밀려와 빙판길이 될 가능성 있어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급격히 추워지는 만큼 노약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가 그친 후 29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30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내달 1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해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서해안에는 눈 소식이 예보됐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전라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을 포함해 첫 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 노동계 동투(冬鬪) 불 붙었다

“노동자 권리, 국민 안전 보장하라…정당 요구에 대화 나서야”

광주·전남지역 노동계가 안전·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잇따라 동투(冬鬪·겨울쟁의)에 돌입했다.

2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운수노동자는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4300여 명이다. 차중·단위 노조 지부에 따라 파업 참여율이 다르지만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이 운송 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된다.

‘총력 투쟁’ 기조 속에서 광주는 코로나19 백신 운송, 제조사업장 별 긴급 출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를 멈춰 세웠다.

전남에서도 탱크로리·벌크 차량 800여 대, 컨테이너 차량 600여 대, 철강 운송차 400여 대 등 총 1900여 대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확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거부한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파업 쟁의에 이어 5개월 만이다.

항만·물류·제조업체가 조기 상품 출하·야적장 확보 등 물류대란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생산 차질마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호남본부도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다.

호남본부 조합원 2651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1100여 명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은 차량정비사·시설관리직·기관차운전사·역무원·열차승무원 등 직무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투쟁 기간동안 시간외·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각종 작업 시간은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한다.

노조는 ▲인력 감축 반대·안전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임금·승진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

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단위 총파업 결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25일 하루동안 파업 결기했다.

급식 종사자·방과 후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광주 4303명, 전남 8961명이다. 이 가운데 파업 당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광주 902명(20.9%), 전남 949명(10.5%)으로 잠정 파악됐다.

파업 여파로 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광주는 전체 254개교 중 128개교였다. 이 중 122개교는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대체했으며 2개교는 급식 시간 전까지 단축수업, 4개교는 재량 휴업했다.

전남도 급식 운영 학교 877개교 중 134개교가 급식을 하루 중단됐다. 빵·우유로 대신한 학교는 100개교, 학사일정 조정 21개교, 간식 제공 11개교, 도시락 지참 2개교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철도 안전 인력 충원·민영화 반대, 학교비정규직·교육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은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며 국민의 생명·안전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다”며 “정부 등 관련 협상 주체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비난하기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호기자

